

무안공항 활성화 협의 알맹이 없이 마무리

'광주·무안공항' 명칭 변경·접근성 개선 등 4가지 안건 논의 운송업자 영업권 등 대책 없어... "기관·지역민 의견 수렴할 것"

무안국제공항의 명칭 변경과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회의가 '알맹이' 없이 마무리됐다. 충분한 의견 조율과 기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회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서 열린 '광주·무안공항 통합 및 활성화 실무협의회'는 광주시 요청으로 상정된 4가지 안건에 대해 협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애초 ▲통합공항 명칭변경 ▲광주시민 공항 접근성 개선 방안(버스·택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할인 및 주차장 이용료 지속 면제 등을 안건으로 논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통합공항 명칭 변경의 경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무안군을 설득할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전남도의 요청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광주시 제안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데, 명칭 변경의 경우 지난 2008년 전남도가 일단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기류가 팽배하다.

애초 광주시 안팎에서는 민간공항 이전과 함께 거론되던 '군 공항 이전' 이 논항을 거두려는 상황에서,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합의한 만큼 도시 브랜드 제고 및 시민 편의

의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 끝에 나온 안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버스 노선 확충 및 광역버스 운영 방안도 광주·전남 버스 운송업자들의 영업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보류됐다.

무안공항으로 민간공항이 통합되면 현재 도심권에서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광주공항과 달리, 180분대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지만 광주·전남 버스운송업자간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민들의 무안공항까지의 택시 이용 시 요금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방안도 택시업체인 협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의 97.6%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점과 향후 무안공항의 주차장 유료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장 사용료 면제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안도 보류됐다.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어 전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협의를 거쳐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회의 참석자간 핵심 안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다보니 의견을 좁히거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차기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마무리된, 사실상 '맹탕' 회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항 활성화 실무협의회에서 제기된 안건들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자주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우상호 의원, 편집권 독립 강화·구독료 세액 공제 등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8일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을 강화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하고, 갈등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정부·정당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썼다.

법안은 각 신문사가 경영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회 일선 기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자 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는 해당 매체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지역 언론 발전에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을 위

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문제부 장관이 관리·운용을 맡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오정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진정한 편집권 독립을 위해선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 구조와 기자들의 편집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009년 만들어진 현재의 신문법은 보수 언론의 종편TV 허가를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악법 중 하나"라며 "10년 전 신문법 개정으로 편집권 독립과 독자 권의 보호, 사회적 공익 추구 등의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 등이 이유로 없이 법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사이트의 지역 신문 차별, 지역 민 알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문법은 바뀌어야 한다"며 "독자와 신문산업 모두를 위한 구독료 세액 공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국고손실·뇌물 인정...형량 늘듯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총 36억 5000만원 가운데 34억5000만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4억5000만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그 밖의 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형량죄로 봤다.

/연합뉴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상 후보에 홍콩시민단체 추천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시민을 광주인권상 후보로 추천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28일 광주시 서구 삼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광주인권상 후보자로 홍콩시민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끌고 있는 민간인권전선은 송환법 반대부터 주요 대형 집회를 주관하고 대중들에 정보를 전달하며 인권침해 방지에 노력했다"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광주인권상 후보로 정식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 시민사회는 내달 10일 전남대에서 재한홍콩시민활동가 간담회를 열어 연대를 이어가겠다"며 "내년 5·18 40주년에는 홍콩과 광주가 함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인권상 후보자 자격은 민주주의 발전, 인권증진 그리고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개인 또는 단체다. 후보자(단체)는 스스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으며, 동일한



28일 오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인권회의 등 시민사회가 민주화 요구 시위에 나선 홍콩시민을 광주인권상 후보에 올리는 추천서를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양항 세풍산단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해야

전남도, 황금산단 등 장기 임대 방안 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하고 광양항 인근 세풍산단과 황금산단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해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8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동부권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전체 실국장과 함께 광양항 배후단지 확대 등 동부권 핵심 현안과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서부권에 위치한 도청 소재지와 물리적 거리 극복을 위해 김영록 전라지사의 정기회의 개최 시에 따른 조치로,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광양만권 활성화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전남도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에 맞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했으며 최근 김영록 도지사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해수부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적극 건의했다.

이와함께 2020년 광양항 항만배후단지가 100%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후단지 확보하면서 광양항 인근 세풍산단과 황금산단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해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개발이 완료돼 즉시 사용 가능한 세풍산단 1단계(33만㎡)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하도록 협의 중이며, 부지 매입비 25억여원을 2020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국회 예산심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같은 전남도의 전략이 현실화되면 3.3㎡(1평)당 98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저조한 세풍·황금산단이 3.3㎡당 850원의 저렴한 임대가로 최장 100년간 안정적으로 장기 임대할 수 있어 광양만권 전체의 획기적 활성화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또 광양항의 선박 항로가 비좁아 선박 하역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촌2산단 앞 3두기장 전면항로 준설과 여천항로의 확장 준설, 광양항 기존 컨테이너 부두에 최고 수준의 자동화항만(4선석) 구축 등 활성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하고 2040년 총 물동량 5억t 달성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항만으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정책회의에서 "동부권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도약에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며 광양만권을 비롯한 동부권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北, 함경남도 연포서 미상발사체 2발 발사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4시59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어떤 종류의 발사체를 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 발사한 지 28일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진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이후 이번에는 미상 발사체 발사 등 '저

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미국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이후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감시 작전 비행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정찰기인 EP-3E가 이날 수도권 등 한반도 상공 2만3000피트(7010.4m)를 비행했다. 미 공군의 E-8C 1대도 한반도 상공 3만2000피트(9753.6m)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전날에는 리벳 조인트(RC-135V) 정찰기도 서울과 경기도 일대 3만1000피트(9448.8m) 상공을 비행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영암 월출산 부근 땅 703㎡ 전원생활적합 6600만원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암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전용 생활적합 1억7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문단면 영산강변 48900㎡ 펜션 14개 등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9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천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 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양 전용 1억3천

상가건물

- 농성동 상공회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완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아파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완암동 아파트 상가 등 지하 206㎡ 매입 2억 청고 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계 무등산 밑 광공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 내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인
- 구례군 구례읍 서서천(경의면) 11060㎡ 다세대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음 6억4천
- 파산중인 주택 구매 계림동 소방도점 땅 142㎡ 2층집 164㎡ 집 전용 1억6천
- 나주시 남대동 상암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앞문앞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인적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